



동남아 경제정보

해외경제연구소
개도국신용평가실
2001. 12. 10.

◆ 제목: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산업의 민영화 추진

I. 석유·가스 산업의 개황

□ 최대 재정수입원·외화가득원 역할

	재정수입(10억 루피아)	상품수출(백만 달러)
석유산업	57,857(20.2%)	7,742(12.6%)
가스산업	17,369 (6.1%)	6,624(10.8%)
계(기타 포함)	286,006(100%)	61,493(100%)

주: 재정수입은 2001년 수정예산안 자료이며, 상품수출은 2000년 기준임.

- 석유·가스 산업은 재정수입의 26.3%, 상품수출의 23.4%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임.
 - ▶ 1980년대 초 이전에는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70%, 상품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한 주도 산업이었음.

□ OPEC 회원국 · 최대 LNG 생산국

	매장량	생산량(2000)	주요 유전
원유	51억 배럴	126만 b/d	Riau/Belanak field
가스	77조 ft ³	2.1조 ft ³ /y	Tangguh/Arun field

주: 원유 생산량은 OPEC회원국 생산량의 4.7%, 가스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3.0% 수준에 이른다.

- 석유탐사는 국영 석유·가스공사인 Pertamina社와의 생산분배 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s)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원유 · 천연가스 생산량 감소

	1996	1997	1998	1999	2000
원유(백만 배럴)	582.7	576.9	568.8	545.7	386.7
천연가스(10억 ft ³)	3,164	3,166	2,979	3,063	2,138

자료: EIU, *Country Profile*, Nov. 2001.

- 1980년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석유시장이 침체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이외 산업의 수출촉진 정책 추진
▶ 수출산업의 다양화 도모
-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부족으로 석유·가스 산업의 생산도 감소추세 시현

II. 석유·가스 산업의 민영화 추진과 시사점

□ 석유·가스 산업의 민영화 법안 채택

- 2001년 10월 23일, 석유·가스 산업의 downstream(imports, supply & distribution)¹⁾ 분야에서 정부의 독점적 운영 철폐
 - ▶ 1971년부터 Pertamina社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국영 석유·가스 분배독점 법안의 철폐로 민영화 추진 예정²⁾
 - ▶ 재정수지 적자·외채상환 부담 완화로 IMF 요구조건 부응³⁾
 - ▶ 재정지출의 20% 이상인 에너지산업의 정부 보조금 지원감축 계기

□ 지방 의회, 석유·가스 산업의 민영화 반대입장 표명

- 2001년 11월 중순에도 Riau, Aceh, West Papua, West & East Java 지방 의회는 석유·가스 산업의 외국기업에 개방반대 의결
 - ▶ 기간산업의 민영화로 표면적으로는 석유·가스 개발의 안정적인 수익배분이 불투명하므로 유전관리의 권한부여 요구⁴⁾

1) 석유 산업의 수송·정제·판매 분야로, 이에 대칭되는 upstream은 탐광·개발·채굴 분야임.
2) 1년 이내에 downstream을 관리하는 agency가 설립되고, 4년 이내에 fuel distribution 관리를 인수함(단, Pertamina社는 2년의 과도기간 이후에 유한책임회사로 남게됨).
3) IMF는 차관지원 조건으로 2001년 중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7% 이내로 억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4) PT Caltex Pacific의 Coastral Plains Pekanbaru(CPP)에 지방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 석유·가스 산업의 민영화 및 지방재정의 분권화에 따른 기대효과

- Pricewaterhouse Coopers의 Pertamina社에 대한 會計監查에 따르면, 1999년 중 同社의 부정부패 및 비효율성으로 40억 달러 이상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함

▶ 민영화 추진:

- ▷ 석유·가스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 경쟁 체제로 전환
- ▷ 산업 전반의 효율성 개선 기대

- Aceh(7월), West Papua(10월) 지역의 재정자치 법안 승인

▶ 지방재정 분권화 추진:

- ▷ 지방 정부의 석유·가스 수익배분 비율을 15%에서 70%로 확대허용 (석유·가스 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개입 확대 예상)
- ▷ 중앙정부: 자원개발의 수익 귀속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지방정부에 대한 에너지산업 보조금 지원 감소(+)
- ▷ 지방정부: 자원개발에 따른 침체된 경기 회복, 자원수입 증대
재정관리의 자율성 향상 예상(+)

문의 : 개도국신용평가실 과장 조양현 ☎ 3779-6654, yhjo@koreaexim.go.kr